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기업 옥죄는 화관법과 화평법, 그 대안은?

[발제자] 박교식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일 시]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31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2015년 제정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K-REACH)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해물질 취급 기준 강화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 및 유해성 등 안전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화관법 시행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 부족으로 2018년 기준으로 2,117건 접수 중 1,616건인 76%가 미처리되고 있다. 사업자는 심사지연으로 신규·변경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때 가동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지정토론자의 토론) 현행 화관법과 화평법은 화학물질 전반에 걸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해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심사를 위한 접수 처리부터 지연되고 있다. 현행 시행 규칙에 있는 많은 세부 내용들이 현장과의 괴리를 안고 있다.
- 법이 추구하는 안전 목적과 현장 적응능력 간에 차이가 커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위험요소들을 파악하여 지시적인 규제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하고 대신 자율규제를 확대하여 기업이 사업장 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자율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K-REACH)

-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장 밖으로 독성을 가진 유해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혹은 사고 범위를 줄이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서로가 알고 있는 공인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이다.
- ◆ 화평법(K-REACH)은 유럽에서 시작된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CHemical)에서 착안한 것으로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공유하고,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 피해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 ◆ 사고는 일반적으로 위험요소(Hazard), 원인, 공정이상, 사고, 영향 진행으로 이루어지며 각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의 연쇄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 신속한 처리의 지연

- ◆ 화관법상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2,117건 접수 중 1,616건인 76%가 미처리되고 있다. 정부가 인력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지고 있다. 사업자는 심사지연으로 신규·변경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때 가동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업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의 정책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어려움

- ◆ 사업장에서는 여러 부처의 기관에서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업현장을 방문함에 따라 대응인력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자칫 위법 시 엄한 처벌 또는 공장가동정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각 법마다 관련 용어가 통일되어있지 않은 문제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중소기업들은 기술적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장에 조사 나온 사람들은 부조리 찾기에 중점을 둔다.
- ◆ 위험성 평가 등 검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기업의 비용 최소화 경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위험성 평가 담당자의 문제도 적지 않다.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 및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습득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렵다. 담당자가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할지라도 감사원의 관리적 지적 및 징계에 대한 염려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사고에 대한 사전적 대비의 필요성

- ◆ 화학물질 기업과 관련자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전 프로그램의 수행사항을 기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플랜트의 설계, 건설 및 조업 시 화공안전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각자가 안전 프로그램에 기여할 의무를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 지평토론자의 토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률은 외국(선진국)과 비교하면 2~4배 정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실정으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10개 부처, 60여 개의 법률이 존재하며 2,500개 정도의 형벌 규제들이 있다.

- ◆ 장외영역평가제도, 유해관리 계획서, 산안법의 안전보건소 작성심의와 관련되어 산안법과 화평법에 중복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 정보제출, 영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들을 환경부, 고용부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화학물질의 명칭, 전 성분, 함유량 등을 공개하게 되어있으며 상당수 동일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중복 규제가 적지 않다.
- ◆ 올해 1월까지 장외영역 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는 약 1만 2천 건 정도 접수되었고 그 중 1/3은 아직까지 미처리된 상황이다. 심사지연으로 기업이 기존 및 신규 시설을 도입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시행 규칙에 있는 많은 세부 내용들이 현장과의 괴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 ◆ 기존에는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한 부분에만 한정하여 일정 수량 이상의 규제가 이뤄졌던 반면 현행 화관법은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서류검사를 했음에도 현장에서도 현장 감사위주가 아니라 서면 위주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인력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관리는 오히려 미흡한 결과를 낳고 있다.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것을 실제로 준수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 사업장에서 실제적인 위험요소들을 파악하여 지시적인 규제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하고 대신 기업에게 자율평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사업장 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자율적인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질문자 질의

- ◆ 화관법과 화평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4가지이다.
 - 1) 이전에는 새로운 물질만 등록하였으나 현행은 모든 기존물질까지 등록해야 하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서류가 많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 2)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평가에 소요되는 부담비용이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3) 부처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측면에서는 개별 기업마다 분절적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시행된 검사 결과에 보완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 4) 조사 단속처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시행 절차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고, 높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개선하여 제도 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따라야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